

2024 미국 대통령 후보
재정/조세 선거공약 비용 비교

트럼프(공화당) VS 해리스(민주당)

2024. 10.



2024 미국 대통령 후보

재정/조세 선거공약 비용 비교

트럼프(공화당) VS 해리스(민주당)

총괄

김빛마로 재정지출분석센터장

김정환 재정제도분석팀장

연구진

구윤모 선임연구원

오윤서 연구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Contents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I	개요	5
II	트럼프 후보 공약 비용	7
	1. 조세 감면 및 지출 증가(안)	8
	2. 세입 증대 및 지출 감축(안)	17
	3. 순이자 지출	21
III	해리스 후보 공약 비용	22
	1. 조세 감면 및 지출 증가(안)	23
	2. 세입 증대 및 지출 감축(안)	31
	3. 순이자 지출	34
IV	평가 및 시사점	35
	1. 주요 항목 비용 비교	35
	2. 사회보장·보건정책 공약의 재정·경제 영향	38
	3. 트럼프 후보의 정책 공약: 4년 전과 비교	40
	4. 해리스 후보의 정책 공약: 4년 전(민주당정책)과 비교	41
	5. 과거 공약 비용 분석에 대한 평가	43
	참고문헌	46

「후보별 주요 정책 1」: 조세 감면 및 지출 증가

- (트럼프 후보) ①2017 세제개혁법 개정 및 연장, ②초과근무 수입 세금 면제, ③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특정 과세 폐지, ④국내 제조업체에 법인세율 추가 인하, ⑤팁(Tip) 소득 세금 면제, ⑥군사력 강화 및 현대화, ⑦국경 강화 및 미승인 이민자 추방, ⑧주택 개혁(생애 첫 주택 구매자 세액공제 포함), ⑨보건, 장기요양, 돌봄 지원 증진 등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
- (해리스 후보) ①2017 세제개혁법 제한 연장, ②고등교육 지출 확대, ③보육에 대한 지원 및 접근성 확대, ④자녀세액공제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 ⑤중소기업, 제조업 및 연구분야 지원, ⑥최저임금 인상 및 팁 소득세 면제, ⑦보편적 유급휴가 지원, ⑧국경 안보 개선, ⑨적정 가격의 주택 지원, ⑩장기 요양 및 간병인 지원, ⑪건강보험료 보조금 강화 정책 연장 및 확대 등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

「후보별 주요 정책 2」: 세입 증대 및 지출 감축

- (트럼프 후보) ①보편적 기준(Universal Baseline) 관세 및 추가 관세 도입, ②에너지 환경 정책 전환 및 생산 확대, ③낭비(waste), 사기(fraud), 남용(Abuse) 감축, ④교육부 폐지 및 학교 선택권(school choice) 확대 등
- (해리스 후보) ①다국적기업 과세, ②법인세율 인상, ③자본 소득 관련 세금 인상, ④메디케어 관련 순투자소득세(NIIT) 인상, ⑤처방약 비용 절감, ⑥기타 세입 증대분 등

「후보 주요 정책 비용」: 중위값을 기준으로 한 정책 비용 제시

- 트럼프(Trump) 후보의 선거 캠프 공약 및 공화당 정강정책에서 제시한 정책을 근거로 한 총 정책 비용은 향후 10년 동안 7.5조달러 전망
- 해리스(Harris) 후보의 선거 캠프 공약 및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제시한 정책을 근거로 한 총 정책 비용은 향후 10년 동안 3.5조달러 전망

I. 개요

- (배경)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는 2024년 11월 5일(화)에 진행 예정
 - *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미국연방법률전서(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 ch. 1, 5 Stat. 721)에 근거하여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로 지정
 - 선거 결과 발표 이후, 2024년 12월 17일에는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이 모여 공식적으로 차기 대통령을 최종 선출
 - * 미국 주 선거인단의 투표는 3 U.S.C. §7에 따라 12월 두 번째 수요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에 진행
 - 최종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은 2025년 1월 20일 취임식을 통해 정오부터 공식 임기* 시작
 - * 미국 수정 헌법 제20조(20th Amendment, Section 1)에서 규정
- 미국 양당(공화·민주)은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
 - 미국 공화당은 2024년 7월 15~18일에 개최된 전당대회를 통해 신규 정강정책을 확정하였으며, 본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됨
 -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상식으로의 회귀”라는 주제로 총 10개의 핵심 정책 발표
 - 미국 민주당은 2024년 8월 19~22일에 개최된 전당대회를 통해 신규 정강정책을 확정하였으며, 본 전당대회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47대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로 공식 지명됨
 - * “경제 성장”등을 중심으로 총 9개 챕터로 구성된 핵심 정책 발표
- 본 보고서에서는 CRFB의 Budget Watch 2024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2024년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약과 양당(공화·민주)의 정강정책(party platform) 등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II장)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공약 정책 및 이에 따른 비용과 순이자 지출을 검토
- (제III장)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정책 및 이에 따른 비용과 순이자 지출을 검토
- (제IV장) 후보별 주요 공약 비용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

[참고]

- 양당 대선후보의 재정·조세 정책 비용 전망은 ‘책임연방예산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CRFB)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요약 작성하였음
- * 2024년 10월 7일 발표 자료 기준
- CRFB의 원문 결과 자료는 미의회예산처(CBO), 세금정책센터(TPC), 각 대선후보 캠프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
- 각 후보의 정책별 공약 비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중위값(central estimates) 기준으로 작성

II. 트럼프 후보 공약 비용

- 트럼프(Trump) 후보의 선거 캠프 공약 및 공화당 정강정책에서 제시한 정책을 근거로 한 총 정책 비용은 향후 10년 동안 7.5조달러 전망
- 트럼프(Trump) 후보의 대선공약 비용은 향후 10년간 최저 비용 1.45조달러~최고 비용 15.15조달러로 추정

〈표 1〉 트럼프 후보 정책별 공약 비용

(단위: 십억달러)

공약 내용	저위 (Low)	중위 (Central)	고위 (High)
• 조세 감면 및 지출 증가			
2017 세제개혁법 개정 및 연장	4,600	5,350	5,950
초과근무 수입 세금 면제	500	2,000	3,000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특정 과세 폐지	1,200	1,300	1,450
국내 제조업체에 법인세율 추가 인하	150	200	600
팁(Tip) 소득 세금 면제	100	300	550
군사력 강화 및 현대화	100	400	2,450
국경 강화 및 미승인 이민자 추방	0	350	1,000
주택 개혁(생애 첫 주택 구매자 세액공제 포함)	100	150	350
보건, 장기요양, 돌봄 지원 증진	50	150	300
소계(Subtotal)	6,800	10,200	15,650
• 세입 증대 및 지출 감축			
보편적 기준(Universal Baseline) 관세 및 추가 관세 도입	-4,300	-2700	-2,000
에너지 환경 정책 전환 및 생산 확대	-750	-700	-550
낭비(waste), 사기(fraud), 남용(Abuse) 감축	-250	-100	0
교육부 폐지 및 학교 선택권(school choice) 확대	-500	-200	-0
소계(Subtotal)	-5,500	-3,700	-2,550
순이자 지출	150	1,000	2,050
총 비용(Total, Net Deficit Impact)	1,450	7,500	15,150

주: 부호가 없는 표시는 비용; 마이너스 표시는 비용 절감 규모
 자료: CRFB, "The Fiscal Impact of the Harris and Trump Campaign Plans - US Budget Watch 2024," 2024.10.

1. 조세 감면 및 지출 증가(안)

가. 2017 세제개혁법(Tax Cuts & Jobs Act, TCJA¹⁾) 개정 및 연장

◇ 트럼프 후보의 2017 세제개혁법 개정 및 연장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약 5.35조달러 비용 소요 전망(최소 \$4.6조~최대 \$5.95조)

※ 세제개혁법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재임 시절 통과(2017.12.20. 의회 최종 확정)시킨 법으로 2017년 12월 22일에 대통령 법안 서명으로 입법 발효되었으며, 트럼프 후보는 이를 연장할 것을 제안한 것임

- 주요 내용²⁾으로는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2025년까지 39.6% → 37%로 조정 및 법인세율(corporate tax rate)을 기존의 4단계 구조에서 21%의 단일세율로 개정,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증가(500만달러 → 1,000만달러) 등이 포함

■ 2025년에 만료되는 세금 감면 제도의 영구화

○ 이와 함께, 장비 및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소(2023년부터 매해 20%씩 축소되어 2026년에 종료 예정³⁾)인 완전 비용 처리(full expensing⁴⁾)를 복원하되,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한해 복원할 것임을 언급

○ 다만,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에 대한 공제 상한선*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힘

* TCJA는 납세자가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소득 공제되는 주 및 지방세의 최대 금액을 1만달러로 설정하고 있음

■ 향후 10년 동안 비용 추계 중위값인 5.35조달러 중에서 5.1조달러는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상한선을 제외한 모든 만료 예정인 개인 및 상속세 감면조치를 연장함으로써 발생

○ 나머지 2,500억달러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장비 및 연구에 대한 비용 처리 복원으로 인해 발생

1) P.L. 115-97

2) 자세한 내용은 『조세동향 17-12호』 참고

3) 2017년 9월 27일~2023년 1월 1일까지는 100% 적용

4) bonus depreciation

나. 초과근무 수당 세금 면제

◇ 트럼프 후보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약 2.0조달러 비용 소요 전망(최소 \$5,000억~최대 \$3.0조)

■ 초과근무 수당*을 연방 소득세 및 급여세(payroll tax) 대상에서 면제

*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반적(often)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으며, 이때의 임금은 일반 임금(normal rate)의 150%로 증가

○ 최근 분석⁵⁾에서는 모든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세금을 면제할 경우 2026회계연도~2035회계연도까지 세수 1.7조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모든 근로자가 세금 혜택을 위해 시간제(hourly pay)로 전환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총비용이 6조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다만, 트럼프 캠프 측은 부정(fraud) 방지와 혜택 남용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음

■ 정책 비용은 해외 법률 사례 및 국내 법률 등을 참고하여 설정한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분석

○ 저위값 시나리오는 오스트리아 및 벨기에의 법률과 유사한 매월 10시간의 초과 근무만 세제 혜택을 받은 경우로 가정하여 5,000억달러로 추산

○ 중위값 시나리오는 초과근무 수입 대상자를 연소득 15만달러(현 고소득 직원 기준 금액⁶⁾) 이하로 제한

• 동 시나리오는 정책적 구조 여부에 대한 양 극단적인 추정에 대한 중간지점에 해당할 것이기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

5) CRFB, "Donald Trump's Proposal to End Taxes on Overtime," 2024.9.24., <https://www.crfb.org/blogs/donald-trumps-proposal-end-taxes-overtime>

6) 고소득 직원(Highly Compensated Employees, HCE) 기준은 특정 혜택을 받을 때 적용하는 IRS 기준으로 개인 소득세 과세 체계와는 다름

- 고위값 시나리오는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을 가정해 3.0조 달러로 추산

다.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특정 과세 폐지

- ◇ 트럼프 후보의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특정 과세 폐지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1.3조 달러 비용 소요 전망(최소 \$1.2조~최대 \$1.45조)
-
- 노령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혜택 수혜자가 기타 수입 25,000달러(부부합산 32,000달러) 이상이 될 경우 과세하였던 소득세 폐지
 - 현재 특정 한도 이상의 기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 수혜금액의 50~85%가 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트럼프 후보는 해당 과세 폐지를 제안
 - * 동 과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조세 수입은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병원보험 기금(Medical Hospital Insurance Trust Fund)에 사용되고 있었음
 - 동 정책(안)에 대한 고위값 추정치는 사회보장·메디케어 신탁 관리 이사회(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rustees)의 기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저위값 추정치는 동적(dynamic) 피드백을 반영한 수치를 기준으로 함

라.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법인세를 추가 인하

- ◇ 트럼프 후보의 법인세를 추가 인하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2,000억달러 비용 소요 전망(최소 \$1,500억~최대 \$6,000억)
- 2017 세제개혁법(TCJA)에 따라 인화된 법인세율(21%*)에서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한해 15%로 추가 인하
 - * 세제개혁법 이전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35%가 적용되었음
 - 트럼프 후보는 인화된 세율을 해외로 위탁(outsourcing), 해외 이전(off-shoring) 또는 미국 근로자를 대체하는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언급
- 한편, 트럼프 캠프는 해당 정책이 어떻게 설계될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명확히 밝히지 않음
 - 정책 옵션으로 2017년에 폐지된 국내 생산 활동 공제(Domestic Production Activity Deduction, DPAD⁷⁾)를 재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 존재
- 동 정책(안)에 대한 저위값 추정치는 잠재적 동적 효과를 반영하였으며, 고위값 추정치는 15% 세율이 더 넓은(more broadly) 범위에 적용될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

7) DPAD: section 199 deduction으로 불리고 있으며, 2004년에 미국 일자리 창출법(American Jobs Creation Act)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국내 생산(production) 활동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음

마. 팁 소득(Tip Income) 세금 면제

◇ 트럼프 후보의 팁 소득 세금 면제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3,000억달러 비용 소요 전망(최소 \$1,000억~최대 \$5,500억)

■ 현 과세체계하에서 임금 소득(wage income)으로 취급되는 팁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

○ 공화당의 정강정책(GOP Platform)에서도 “수백만 명의 레스토랑 및 숙박업 종사자들을 위해 팁에 대한 세금을 폐지”할 것으로 선언(declared)하고 있음

■ 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면제 조치가 소득세와 급여세에 적용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guardrails)⁸⁾도 같이 존재할 경우 3,000억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

* 한편, 소득이 팁으로 재분류되는 사례가 증가할 경우 실제 세수 손실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고위값 추정치(5,500억달러)는 큰 행태 변화 영향(large behavioral effects)과 상당한 남용 (substantial abuse)을 가정하여 추정

○ 저위값 추정치는 동 정책이 소득세에만 적용*되고 남용이 거의 없으며 강력한 방지 장치가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추정

* 트럼프 후보는 팁 소득 면제 범위와 관련하여 사회보험급여세(payroll taxes) 포함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음(해리스 후보는 소득세만 면제 제안)⁹⁾

8) 약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 등(예. 고용주가 임금을 팁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여,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유리하게 적용); Forbes, “No Tax On Tips Act—Implications And Reservations,” 2024.6.26., <https://www.forbes.com/sites/andrewleahey/2024/06/26/no-tax-on-tips-act-implications-and-reservations/>, 검색일자: 2024.10.28.

9) The Washington Post, “Why Trump’s and Harris’s ‘no tax on tips’ plans may not help tipped workers,” 2024.8.13.,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4/08/13/trump-harris-tax-free-tips/>, 검색일자: 2024.10.28.

바. 군사력 강화 및 현대화

- ◇ 트럼프 후보의 군사력 강화 및 현대화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4,000억달러 비용 소요 전망(최소 \$1,000억~최대 \$2.45조)
-
- 2024 공화당 정강정책에서는 “미국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치명적이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으로 명시
 - 특히, 군인 급여 인상 및 아이언 돔 미사일 방어망(Iron Dome Missile Defense Shield) 구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트럼프 후보도 수차례 언급한 사항으로 기록
 - 트럼프 후보가 제시한 국방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 비용의 구체적 산정은 어려우나, 현행 국방 예산 대비 지출 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
 - 고위값(\$2.45조)은 트럼프 후보가 과거 당시 대통령 재임 시기에 “NATO 회원국들이 GDP의 4%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미국의 일부 동맹국들은 미국 역시 이와 유사한 수준의 국방 지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 전망으로서, 이 증액안이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
 - 중위값 추정치는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재임 시절의 마지막 예산안인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제안한 국방 지출 비율과 일치하는 수준인 GDP 대비 약 3.2%를 향후 재임 기간(4년) 동안 유지할 경우를 반영
 - 저위값 추정치는 트럼프 후보가 현재 예상되는 국방 예산 내에서 군대 현대화와 군인 급여 인상을 추진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1,000억달러를 추가로 지출한다고 가정한 경우를 반영

사. 국경 강화 및 미승인(unauthorized) 이민자 추방

- ◇ 트럼프 후보의 국경 강화 및 미승인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3,500억달러 비용 소요 전망(최소 \$0~최대 \$1.0조)
- 트럼프 유세 연설 및 2024 공화당 정강정책에서는 “미국 역사상 최대 추방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
 - 공화당 정강정책은 국경 안보 개선(국경 장벽 완공 포함), 이민세관단속국(ICE¹⁰) 강화, 불법 입국 및 비자 초과 체류에 대한 처벌 강화, 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정책¹¹ 복원, 이민자 피난처(보호 도시, sanctuary cities) 자금지원 중단, 미등록 이민자들(undocumented immigrants)의 세금 혜택 차단, 여행 제한 강화 등 불법 이민 감소를 위한 정책들을 포함
- 대규모 추방이 이행될 경우, 연방 세금을 납부하는 인구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여 정부의 재정적자가 거의 확실하게(almost certainly) 증가할 것으로 분석
 - 인구 감소 등을 제외하면, 국경 강화 및 이민자 추방 정책들 중 많은 부분은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¹²
- 중위값 추정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의 이민 증가 상황 및 예상되는 이민 급증 추세의 절반 정도를 하락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 이민자 인구는 약 44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3,500억달러 적자 증가 전망¹³
 - 고위값 추정치(\$1조)는 이민 급증을 전면적으로 되돌리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경우를 반영
 - 저위값 추정치(\$0)는 인구 효과를 무시하고, 다른 변화들로 상쇄될 것을 반영

10) ICE: 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

11) 2019년에 도입(현재는 폐지된 상태)된 Migrant Protection Protocols(MPP) 정책이며, 이민 법원이 이민 신청자를 심사하는 동안 미국 내가 아닌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한 정책

12) 이민자들에게 부여했던 세금 혜택 중단 및 이민자 피난처에 대한 자금 중단 등에 기인

13) CBO 추정치 기준

아. 주택 개혁(생애 첫 주택 구매자 세액공제 포함)

◇ 트럼프 후보의 주택 개혁(생애 첫 주택 구매자 세액공제 포함)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1,500억달러 비용 소요 전망(최소 \$1,000억~최대 \$3,500억)

- 2024 공화당 정강정책은 주택을 보다 저렴하게 하면서, 세제 혜택을 통해 주택 소유를 장려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예. 세액공제 등)를 강조하고 있음
- 트럼프 캠프는 해당 세액공제의 세부사항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2009년과 2010년에 시행*되었던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8,000달러 세액공제” 부활이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음
 - * 동 정책은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입법된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of 2009)에 포함된 항목으로 주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중위값 추정치에 의하면, 공제액을 2010년 추진 당시 명목 규모(\$8,000)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만달러로 책정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1,50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저위값 추정치의 경우, 2010년 당시 명목 규모(\$8,000)를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반영
 - 고위값 추정치의 경우,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 캠프에서 제안한 공제 규모와 유사한 2만 5,000달러로 책정할 경우를 반영

자. 보건, 장기요양, 돌봄 지원 증진

◇ 트럼프 후보의 보건, 장기요양, 돌봄 지원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1,500억달러 비용 소요 전망(최소 \$500억~최대 \$3,000억)

- 2024 공화당 정강정책은 만성 질환 관리, 장기 요양, 1차 진료 접근성, 가정 내 노인 돌봄(무급 가족 돌봄 제공자¹⁴⁾ 세액공제 포함) 개선을 촉구
 - 또한, 최근 트럼프 후보는 “트럼프 정부하에서는 모든 시험관 수정 치료(In-Vitro Fertilization, IVF) 비용을 정부 또는 보험회사가 부담(mandated)하도록 할 것이며, 신생아 관련 주요 비용 또한 세금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힘
 - 트럼프 캠프는 당해 정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장기 요양 지원은 가족 돌봄 비용에 대해 최대 3,000달러를 세액공제하는 법안(Credit for Caring Act¹⁵⁾) 및 메디케이드의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HCBS)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
- 중위값 추정치에 의하면, 메디케이드를 통한 IVF 비용 부담, 신생아 의료 비용 소득공제 (tax deductibility), 기타 관련 투자 조치를 포함한 경우를 반영
 - 저위값 추정치의 경우, IVF 비용 부담 및 신생아 관련 세금 공제만을 가정하여 반영
 - 고위값 추정치의 경우, IVF 비용을 연방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더 큰 투자가 이행될 경우를 반영

14) unpaid family caregivers

15) Credit for Caring Act는 확정된 법이 아닌 법안으로서 하원(H.R. 3321)과 상원(S. 1670)에서 관련 법안으로 발의된 바 있음

2. 세입 증대 및 지출 감축(안)

가. 보편적 기준(Universal Baseline) 관세 및 추가 관세 도입

◇ 트럼프 후보의 보편적 기준 관세 및 추가 과세 도입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2.7조달러 규모의 수입 증가 전망(최소 \$2.0조~최대 \$4.3조)

■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2024년 트럼프 캠프의 핵심 계획으로, 2024년 공화당 정강정책에서도 수입품 관세 인상 및 불공정 무역 관행 처벌 등을 통한 무역 재조정(re-balancing)·전략적 독립 확보(securing strategic independence)·제조업 활성화 등을 제안

○ 이와 함께, 트럼프 후보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기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적용하며,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

* 트럼프 후보는 기준 관세를 10%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자주 발언한 바 있으나, 20%를 언급하기도 함

■ 수입 증대 중위값은 보편적 기준 관세 10%(2조 5천억달러) 및 기타 세수를 반영한 경우이며, 수입 증대 최대치는 20%의 기준 관세를 가정하여 추정

○ 수입 증대(안)에 대한 고위값은 거시적 영향을 반영

○ 또한, 무역 정책의 큰 변화는 표준 세금 모델이 추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특수성(novelty)으로 인해 경제적 영향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움을 언급

■ 한편, Tax Foundation¹⁶⁾에 따르면 10%의 보편적 관세와 60%의 중국 수입 관세는 GDP를 1.2%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

16) Tax Foundation, "Donald Trump Tax Plan Ideas: Details and Analysis," 2024.10.14.,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donald-trump-tax-plan-2024/>, 검색일자: 2024.10.21.

나. 에너지 환경 정책 전환(reverse) 및 생산 확대

- ◇ 트럼프 후보의 에너지 환경 정책 전환 및 생산 확대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7,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 증가 전망(최소 \$5,500억~최대 \$7,500억)
-
- 2024 공화당 정강정책은 미국 에너지 활성화(unleashing)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적 그린 뉴딜(Socialist Green New Deal) 종료, 국내 에너지 생산 확대 및 다양한 규제(예. 전기차 관련 규정) 폐지를 제안
 - 추가적으로, 트럼프 후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철회할 것임을 언급
 - 이런 제안을 바탕으로, 트럼프 후보는 IRA에 포함된 세액공제와 지출을 종료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차량 배출 규제도 폐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7,000억 달러의 비용 절감 추정
 - 수입 증대 저위값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및 전력 생산, 전기차, IRA 관련 지출 조항 및 차량 배출 규제 관련 세액공제만 철회하는 경우를 반영
 - 고위값은 더욱 확대된(somewhat more aggressive) 철회를 가정하여 분석

다. 낭비(waste), 사기(fraud), 남용(Abuse) 감축

- ◇ 트럼프 후보의 낭비, 사기, 남용 감축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1,000억달러 규모의 수입 증가 전망(최소 \$0~최대 \$2,500억)
- 트럼프 후보는 캠프 웹페이지에서 전방위적인 낭비, 사기, 남용 감축을 약속했으며, 2024 정강정책에서도 낭비성 지출 억제에 대한 공약이 포함되어 있음
 - 추가적으로, 트럼프 후보는 낭비를 식별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위원회(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 설립을 제안함
- 트럼프 캠프는 낭비, 사기, 남용을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재임 시절 예산안*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시행할 경우 1,00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 발생 전망
 - * 2020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은 메디케이드 자격 검토 주기 단축¹⁷⁾, 영양지원의 자격 기준 강화¹⁸⁾, 다양한 프로그램 간 정보 보고 및 공유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수입 증대 저위값은 세부 사항이 부족하기에 절감 효과가 없을 것으로 간주
 - 수입 증대 고위값은 트럼프의 2019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에서 정부 전반의 부적절한 지출을 감축하기 위한 1,500억달러를 포함한 수치임

17) Medicaid eligibility redeterminations

18) restrictions to categorical eligibility for nutrition benefits

라. 교육부 폐지 및 학교 선택권(school choice) 확대

- ◇ 트럼프 후보의 교육부 폐지 및 학교 선택권 확대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 증가 전망(최소 \$0~최대 \$2,000억)
- 2024 공화당 정강정책은 다양한 교육 개혁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히 보편적 학교 선택권 지원과 미 교육부 폐지를 제안함
 - 2024회계연도에 교육부를 통해 약 600억달러의 재량 지출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며, 교육부가 폐지될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주정부나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어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학교 선택권 바우처(school choice vouchers)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
-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분석¹⁹⁾에 따르면, 교육부를 폐지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2,000억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동 수치는 수입 증대 고위값과 동일
 - 수입 증대 저위값은 동 정책으로 인한 절감액이 학교 바우처 또는 교육 정책의 다른 분야를 지원하는 데 재투자될 것을 반영

19) Heritage, "Correcting Carter's Mistake: Removing Cabinet Status from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4.5.4., <https://www.heritage.org/education/report/correcting-carters-mistake-removing-cabinet-status-the-us-department-education>, 검색일자: 2024.10.21.

3. 순이자 지출

◇ 트럼프 후보의 공약으로 인한 순이자 지출은 향후 10년 동안 1.0조달러 비용 소요 전망
(최소 \$1,500억~최대 \$2.05조)

- 트럼프 후보의 모든 공약 정책이 2026년에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세 가지 추정 시나리오 모두(고위·중위·저위)에서 2035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를 증가시킴에 따라 이자 비용도 증가
- 언급된 세 가지 추정치는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금리에 미칠 영향은 반영하지 않음

Ⅲ. 해리스 후보 공약 비용

- (총 정책비용) 해리스(Harris) 후보의 선거 캠프 공약 및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제시한 정책을 근거로 한 총 정책비용은 향후 10년 동안 3.5조달러 전망
- 해리스(Harris) 후보의 대선공약 비용은 향후 10년간 최저 비용은 0달러이며, 최고 비용은 8.1조달러로 추정

〈표 2〉 해리스 후보 정책별 공약 비용

(단위: 십억달러)

공약 내용	저위 (Low)	중위 (Central)	고위 (High)
• 조세 감면 및 지출 증가			
소득 40만달러 미만 가구 대상 TCJA 연장	2,050	3,000	3,600
자녀세액공제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	1,400	1,400	1,400
건강보험료 보조금 강화 연장 및 확대	350	550	600
적정 가격의 주택 지원	200	250	500
최저임금 인상 및 팁 소득세 면제	100	200	350
국경 보안 개선	0	100	200
중소기업, 제조업 및 연구 분야 지원	150	150	200
보육에 대한 지원과 접근성 확대	400	700	950
보편적 유급휴가 지원	200	350	700
고등교육 지출 확대	150	350	700
장기 요양 및 가족 간병인 지원	100	200	500
소계(Subtotal)	5,100	7,250	9,700
• 세입 증대 및 지출 감축			
법인세율 인상	-1,350	-900	-750
자본 소득 관련 세금 인상	-900	-850	-700
메디케어 관련 순투자소득세 인상	-800	-800	-600
다국적기업 과세	-650	-550	-550
처방약 비용 절감	-250	-250	-200
기타 세입 증대분	-1,150	-900	0
소계(Subtotal)	-5,100	-4,250	-2,800
순이자 지출	0	500	1,200
총 비용(Total Deficit Impact)	0	3,500	8,100

주: 부호가 없는 표시는 비용; 마이너스 표시는 비용 절감 규모

자료: CRFB, "The Fiscal Impact of the Harris and Trump Campaign Plans," 2024.10.

1. 조세 감면 및 지출 증가(안)

가. 2017 세제개혁법(TCJA) 개정 및 연장

◇ 해리스 후보의 세제개혁법 개정 및 연장 정책으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약 3조달러 비용 소요 전망(최소 \$2.05조~최대 \$3.60조)

■ 세제개혁법(TCJA) 중 개인 소득세 세금 감면 혜택만 연장하되 연소득 40만달러 미만 가구에 한정하여 적용

- 해리스는 공약집을 통해 “연소득 40만달러 미만인 사람이 세금을 이전보다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공약 정보는 부재
- 해당 공약은 차기 대통령 임기 첫해(2025년)에 만료되는 감세 및 일자리법(TCJA; Tax Cuts and Jobs Act, 2017)의 연장을 통해 구현될 것으로 전망
- 해당 공약은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과세 강화를 추진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2025회계연도 예산안 내 언급)의 계승으로 보임
 - 바이든 대통령 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될 경우, 감세 및 일자리법(TCJA) 세금 감면 대상 중 법인세 또는 상속세를 제외하고 개인 소득세(단, 연소득 40만달러 이하)만 감면 연장
 - 연소득 40만달러 미만에 한정된 개인 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비용 추정된 결과, 향후 10년 동안 3조달러의 재정지출이 수반될 예정

나. 보육 및 교육 지원 확대

- ◇ 해리스 후보의 보육 및 교육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약 1.05조달러 비용 소요 전망 (최소 \$5,500억~최대 \$1.65조)

■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지출 확대(3,500억달러 소요 전망)

-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비용 절감, 공교육 강화, 견습 및 훈련 프로그램 확대, 학자금 부담 경감 등 다방면의 정책 방향 제시
- 정책에 대해 구체화된 내용이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2025회계연도 예산안 계획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Pell Grants) 두 배 증대, 등록금 없는 커뮤니티 칼리지 시행, 견습직 접근성 확대 등)을 적용한다고 가정 시 3,500억달러 비용 소요 추산

■ 보육(Pre-K and Child Care)에 대한 지원과 접근성 확대(7,000억달러 소요 전망)

- 보육비용이 소득의 7%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구체적 정책 부재
 - 바이든 재임 당시 추진된²⁰⁾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안²¹⁾에 대응 되는 공약으로 추정
- 정책 세부 내용이 부재하여, 바이든 행정부 2025회계연도 예산안 보육 정책 차용을 가정 시 7,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
 -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주(state) 보육 정책의 지원을 확대하며 4세 아동 대상으로 무상 보편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주 간 파트너십 구축

20) 2021년 11월 하원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양당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후 최종 법안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일부 조항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편성됨

21) 중위소득의 75% 미만 가구 대상 보육비용 전액 보조, 중위 소득 150~250% 이하 가구 대상 보육비용을 소득의 7%로 제한하는 차등 보조금 제공 등의 내용을 포괄

다. 소득보장성 세액공제 확대

- ◇ 해리스 후보의 소득보장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약 1.4조달러 비용 소요 전망 (최소·중위·최대값 모두 동일)

■ 자녀세액공제(CTC)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자녀세액공제(CTC)를 전면 환급 가능한 구조로 전환 및 세액공제 규모 확대 추진
 - 기존의 부분 환급 가능(partially-refundable)²²⁾ 세액공제 형태에서 전면 환급 형태로 전환 추진
 - 세액공제 규모는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책인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RP)에서 확대한 규모로 재시행*하고 이에 더해 신생아 자녀당 6,000달러 공제 추진
 - 기존 세제개혁법(TCJA)하의 시행 규모인 자녀당 최대 2,000달러에서 미국 구조계획법 당시 확대 수준인 6세 이하 자녀당 3,600달러 및 6세 이상 자녀 3,000달러 공제까지 확대
- 무자녀 근로자(workers without dependent children)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규모를 현 632달러에서 1,749달러까지 확대 계획

22) 자녀세액공제(CTC)는 기본적으로 최종세액만큼 공제하나, 부가자녀세액공제(ACTC; Additional Child Tax Credit)를 통해서도 초과공제금액에 대해서도 자녀당 최대 1,4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음

라. 중소기업 및 산업 지원

- ◇ 해리스 후보의 중소기업 및 산업 지원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약 1,500억달러 비용 소요 전망(최소 \$1,500억~최대 \$2,000억)

■ 중소기업, 제조업 및 연구 분야 지원

- 주력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유치를 목표로 미국 전진 세액공제(American Forward Tax Credit) 신설
 - 철강, 반도체, 항공우주 등 미래 산업에서 미국의 전략적 유지 지원 및 제조, 농업, 에너지 등 미국 과거 기반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함
 - 자동화 증가에 따른 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노조 및 지역사회 협력 기업 및 기존 근로자 임금 보호 기업에 보상을 제공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보장을 위해 다수의 정책 제시
 - 스타트업 비용 소득공제(tax deduction)²³⁾를 최대 5천달러에서 5만달러까지 확대²⁴⁾
 -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 제공을 위한 중소기업 확장 기금(small business expansion fund) 신설
 - 연방 조달 계약 건의 최소 3분의 1을 중소기업 수주로 보장
 - 중소기업의 세금 신고 간소화를 돕기 위해 개인 신고자 표준 공제와 유사한 중소기업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for businesses) 개발

23) 창업비용 및 초기 운영비용을 최대 5,000달러(조직 비용으로 5,000달러 추가 공제 가능)를 공제할 수 있으며, 창업비용이 5만달러가 초과되는 경우 초과분만큼 공제금액이 감소(출처: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forms-pubs/changes-to-publication-583-rev-january-2021>)

24) 확대 이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창업비용이 5만 5천달러 이하였다면, 확대 이후 10만달러 이하로 증대

마. 근로자 임금 보호 정책

◇ 해리스 후보의 근로자 임금 보호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약 5,500억달러 비용 소요 전망(최소 \$3,000억~최대 \$1.05조)

■ 최저임금 인상 및 팁(Tips) 소득세 면제(2,000억달러 소요 전망)

- 해리스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미만 임금 폐지”와 “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팁 세금 철폐”를 위해 싸울 것을 강조
- 팁의 면세 범위에 급여세(Payroll Tax)²⁵⁾는 제외되고 소득세로 한정하며,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한도를 두고 부가적인 보호장치를 도입할 계획
- 정책 포괄 범위, 유발되는 행태 변화, 재정적 영향 등에 따라 최소 1,000억달러에서 최대 3,500억달러가 소요될 전망
 -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간접적으로 재정적자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저소득 의료종사자의 임금을 전인하여 연방 의료 지출 및 메디케이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해당

■ 보편적 유급휴가 지원(3,500억달러 소요 전망)

- 해리스 후보는 모든 미국인의 가족 및 질병 유급휴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공약 하였으나 구체적 정책 부재
- 과거 추진되었던 유사한 정책을 참고하여 정책 비용을 추산할 경우 최소 2,000억 달러에서 최대 7,000억달러 소요 추정
 - 기준선 가정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행정부의 2025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점진적인 임금 대체 구조하에 최대 12주 휴가 제공)을 채택한다고 가정
 - 최소 추정치는 4주 유급휴가 프로그램을 제안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안을 차용하였으며, 최대 추정치는 12주 유급휴가 및 임금의 3분의 2를 휴가 기간 내 지급을 제안하는 가족의료휴가법(2020 FAMILY Act)을 가정

25) 사회보험 및 메디케어세 등이 해당

바. 국경 안보

- ◇ 해리스 후보의 국경 안보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약 1,000억달러 비용 소요 전망 (최소: \$0~최대 \$2,000억)

■ 국경 안보 개선

- 2023년부터 추진되었다가 최종 국가 안보 법안(H.R. 815)에서 제외되었던 초당적 국경 안보 법안(bipartisan border security bill)²⁶⁾을 재추진
 - 국경 보안요원 및 경찰관 배치, 마약 단속 검사기 설치 지원, 망명 및 이민 심사 가속화를 위한 인력 증원 등 210억달러 규모의 지출을 포괄
- 정책 시행으로 수반되는 직접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해당 정책으로 인해 이민자 수가 감소하여 세수 또한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이민자 수가 감소할 경우 연방 지출도 감소하겠으나, 이를 상쇄할 세입의 감소분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
 - 정책에 의해 유발된 이민자 구성 변화에 따라 최대 2천억달러 재정적자 증가 추산

26)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3년 10월 국경 안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 등을 담은 긴급 추경 세출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양당이 이견을 보여 무산된 뒤, 2024년 2월에 재추진되어 최종 국경 안보 예산을 제외하고 법안(H.R.815)으로 서명됨(『KIPF 재정동향』, 2024년 2월호 참고)

사. 주택 지원

◇ 해리스 후보의 주택 지원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약 2,500억달러 비용 소요 전망 (최소 \$2,000억~최대 \$5,000억)

■ 적정 가격의 주택(affordable housing) 지원

-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4년간 2만 5천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며, 해당 정책만으로 2,000억달러 재정지출 소요 추정
- 그 외 주택혁신기금(housing innovation fund)에 400억달러 지급, 신규 주택 건설에 세제 혜택 제공,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 확대, 이웃 주택 세액공제 (NHTC: Neighborhood Homes Tax Credit)²⁷⁾를 계획
- 주택 지원 관련 세액공제들이 영구화될 시 주택 지원 소요 비용은 총 5,000달러 규모로 추계됨

27) 주택 재건 및 공사 비용과 주택의 시장가 사이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제도

아. 보건, 장기요양, 돌봄 지원 증진

- ◇ 해리스 후보의 보건, 장기요양, 돌봄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약 7,500억달러 비용 소요 전망(최소 \$5,500억~최대 \$1.3조)

■ 장기 요양 및 가족 간병인 지원(2,000억달러 소요 전망)

- 공약집²⁸⁾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고품질 재택 간호 서비스 확대”와 “간병인 및 가족 간병인 지원” 계획을 발표
-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부재하여 관련 기존 추진 정책 계획을 참고하여 소요 비용을 추정할 경우 2,000억달러로 추산
 - 관련 기존 정책으로 바이든 행정부 2025년 예산안의 메디케이드 재택 및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와 가족 간병인 3,000달러 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하는 법안(Credit for Caring Act of 2019)이 존재

■ 건강보험료 보조금 강화 정책 연장 및 확대(5,500억달러 소요 전망)

- 해리스 후보는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 기반 건강보험시장 대상 세금 공제²⁹⁾ 확대의 영구화를 공약
- 구체적인 정책 방법이 부재하나, 바이든 대통령의 2025회계연도 예산안의 계획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른 메디케이드 확대를 채택하지 않은 주의 빈곤선 이하 소득 가구 지원)을 채택할 시 정책 수반 비용으로 5,500억~6,000억달러 추계

28) New Way Forward for the Middle Class Agenda

29)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의해 시행된 정책 중 하나로, 건강보험을 온라인 등에서 구매 가능하도록 주 혹은 연방정부에서 운용하는 건강보험 시장이 운영되며 개인의 수입에 따라 보험료 보조가 일부 제공

2. 세입 증대 및 지출 감축(안)

가. 다국적기업 과세

- ◇ 해리스 후보의 다국적기업 과세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수입을 약 5,500억달러 증가시킬 전망(최소 \$5,500억~최대 \$6,500억)

■ 다국적기업 과세

- 기업이 더 이상 해외로 일자리와 이윤을 이전할 유인을 갖지 못하도록 국제 조세 체계 개혁 추진
- 글로벌 무형자산 발생소득(GILTI)의 유효세율³⁰⁾을 10.5%에서 21%로 인상하고 전 세계 통합 기준이 아닌 관할국별 기준(jurisdiction-by-jurisdiction basis)을 적용

나. 법인세율 인상

- ◇ 해리스 후보의 법인세율 인상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수입을 약 9,000억달러 증가시킬 전망(최소 \$7,500억~최대 \$1.35조)

■ 법인세율 인상

-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
 - 세제개혁법(최고세율 35% → 단일세율 21%)에 따른 세율 인하폭을 절반(7%) 복원하고 세원을 확대하는 공약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음

30)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 대비 10% 이상 초과 소득이 발생 시 무형자산 소득(GILTI: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으로 인식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

다. 부유층 과세

- ◇ 해리스 후보의 부유층 과세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수입을 약 1.65조달러 증가시킬 전망 (최소 \$1.3조~최대 \$1.7조)

■ 자본 소득 관련 세금 인상(수입 9,000억달러 증가)

-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가구에 대해 장기 자본이득세(long-term capital gains tax)의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28%로 인상
- 환매세(buyback tax)를 1%에서 4%로 4배 인상
- 부유세(billionaire minimum tax)의 일환으로 미실현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 추진³¹⁾

■ 메디케어 관련 순투자소득세(NIIT)³²⁾ 인상(수입 8,000억달러 증가)

- 해리스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부유층이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도록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납세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2025회계연도 예산안의 세수 증대 조치를 모두 지지한다고 언론에 밝힘
-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 증세안의 골자 아래, 40만달러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순투자소득세를 3.8%에서 5%로 인상하여 메디케어 병원보험 신탁기금(Medicare Hospital Insurance trust fund)의 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

31) 구체적인 과세 추진 계획은 부재하나, 바이든 행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담긴 미실현 이익을 포함하여 재산 및 소득을 산정하고, 재산이 1억달러 이상일 경우 소득세 최저세율을 25% 적용하는 부유세 방안의 연장선상일 가능성이 농후

32) 순투자소득이나 특정 소득 구간(부부합산 25만달러, 부부개별 12만 5천달러, 가장 혹은 단독가구 20만달러)을 초과할 시 수정조정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과세 기준이 됨

라. 기타 증세 및 재정지출 감소

◇ 해리스 후보의 기타 증세 및 재정지출 감소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수입을 약 1.15조달러 증가시킬 전망(최소 \$2,000억~최대 \$1.4조)

■ 처방약 비용 절감을 통한 메디케어 지출 축소(수입 2,500억달러 증가)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³³⁾의 의약품 단가 협상 확대 및 가속화
- 인슐린 처방의 월 본인 부담 비용 상한(\$35) 정책을 기존 메디케어 수혜자 이외에도 일반 의약품 시장을 통한 구매자까지 확대 시행³⁴⁾
- 제약회사와 약국 등의 시장 경쟁을 저해(anti-competitive)하는 행태 해결

■ 기타 세입 증대분(수입 9,000억달러 증가)

-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행정부 예산의 증세 계획을 전면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연설 및 언론을 통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일부 바이든 행정부 예산의 증세 계획이 존재
 - 기업 소득³⁵⁾ 10억달러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 최저세율(CAMT)을 15%에서 21%로 인상
 - 고위 임원 급여(compensation)가 백만달러를 초과하여 임금 비용 공제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장기업에서 전 기업으로 확대

33) 고혈압 및 고지혈증 치료제 등 고가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 파트 D의 약품 중 10개의 약품이 최초 협상 대상이 된 바 있음(출처: CMS, <https://www.cms.gov/inflation-reduction-act-and-medicare/medicare-drug-price-negotiation>, 검색일자: 2024.10.14.)

34) 해당 정책은 수입 증대(지출 감소)가 아닌 정책 비용 소요를 수반하나 다른 지출 감소 정책과 함께 포괄되므로 함께 기술함

35) 주주 대상으로 공시되는 경영 보고서의 기업 소득(Book income) 기준

- 고소득 개인 및 기업의 세금 체납 및 고액 규모 탈세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국세청의 자금 부족 문제 해결, 고객 서비스 개선, IT 인프라 현대화 추진 등
-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을 수렴할 시 수입은 9,000억 달러 증가 전망

3. 순이자 지출

- ◇ 해리스 후보의 공약으로 인한 순이자 지출로 향후 10년 동안 5,000억달러 비용 소요 전망(최소 \$0~최대 \$1.20조)
- 해리스의 모든 공약 정책이 2026년에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소요 비용 추정의 중위 및 최대치가 재정적자를 수반하므로 이에 따라 이자 비용도 증가
 - 정책 소요 비용의 최소 추정치가 재정 중립적(재정적자 미발생)임에 따라, 순이자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시나리오도 존재
 - 모든 순이자 지출 추정은 공약이 금리에 미칠 영향을 반영하지 않음

IV. 평가 및 시사점³⁶⁾

1. 주요 항목 비용 비교

- (총 비용) 트럼프 후보의 총 정책 비용(중위값 기준)은 해리스 후보의 총 정책 비용보다 4.0조달러 더 크게(약 2.1배) 나타남
- 트럼프 후보는 3.7조달러, 해리스 후보는 4.25조달러의 세입 증대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두 후보의 각 지출 비용의 일정 부분(해리스 58%, 트럼프 36%) 상쇄 전망

〈표 3〉 미 대선후보 정책 공약 비용(중위값) 비교

(단위: 십억달러)

구분	트럼프	해리스
세제개혁법(TCJA) 일부 조항 연장 및 수정	5,350	3,000
개인 세금 감축 및 세제 혜택(tax breaks) 확대	3,600	1,600
기업 세금 감축 및 세제 혜택(tax breaks) 확대	200	150
보건 및 장기요양 지원 확대	150	750
국방비 확대	400	n/a
유급휴가, 유아교육, 보육 및 교육 지원 확대	n/a	1,400
이민 제한 및 국경 보안 강화	350	100
주택 관련 지출 및 세제 혜택(tax breaks) 확대	150	250
소계(Subtotal)	10,200	7,250
법인세 및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n/a	-4,000
관세 인상	-2,700	n/a
기타 지출 및 세제 혜택 축소	-1,000	-250
소계(Subtotal)	-3,700	-4,250
순이자(Net Interest)	1,000	500
총 비용(Total, Net Deficit Impact)	7,500	3,500

주: 1. 재정지출 축소(-), 재정지출 확대(+), 증세(-), 감세(+)

2. 〈표 3〉은 양당 후보의 비용 비교를 위해 항목에 대한 개념을 넓게 정리한 표로서 〈표 1〉과 〈표 2〉의 정책 각 항목이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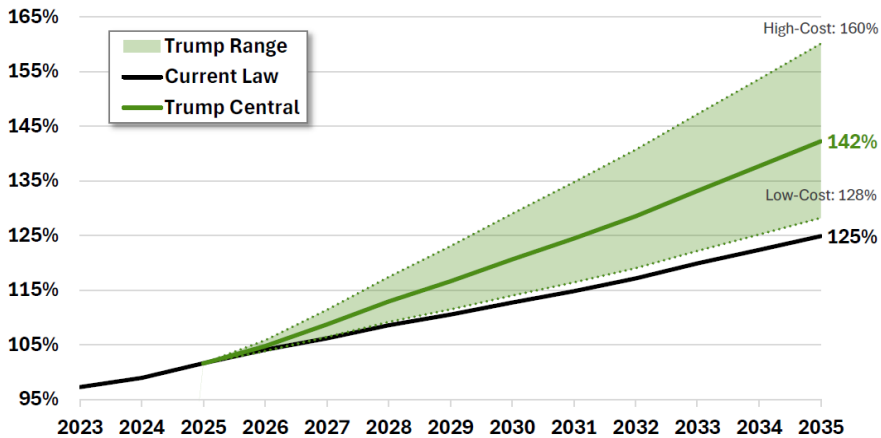
자료: CRFB, "The Fiscal Impact of the Harris and Trump Campaign Plans - US Budget Watch 2024," 2024.10.

36) 평가 및 시사점은 CRFB와 양당(공화-민주당)의 정강정책(party platform)을 토대로 작성

- (세제개혁법 관련 지출) 두 후보 공약에서 모두 가장 큰 규모이자 양 후보 간에 가장 큰 규모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공약으로, 트럼프 후보의 공약 비용(5.35조달러)은 해리스 후보의 공약 비용(3.0조달러) 대비 약 1.8배 큰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적용범위 차이) 해리스 후보가 연장 대상을 개인 소득세에 한정하는 반면, 트럼프 후보의 경우 법인세율과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 연장을 추진
 - (소득제한 차이) 해리스 캠프의 경우 부유층 과세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기 때문에, 세제개혁법(TCJA) 연장 대상을 40만달러 미만으로 한정하여 적용
- (개인·기업 세금 감축 및 세제 혜택) 해당 정책 모두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해리스 후보 공약 대비 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개인에 대한 세금 감축 및 세제 혜택 확대 정책의 경우,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해리스 후보의 공약보다 비용이 약 2.3배 더 높음
 - 기업에 대한 세금 감축 및 세제 혜택 확대 정책 또한 트럼프 후보가 높은 수치(약 1.3배)를 보이긴 하나, 해리스 후보의 공약과 비교적 유사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
- (국경안보·이민 정책) 트럼프와 바이든(해리스 부통령) 재임 시기에 지속적인 이슈가 되었던 국경 및 이민 관련 정책은 트럼프 후보의 공약(\$3,500억)이 해리스 후보의 공약(\$1,000억)보다 비용이 3.5배 높게 나타남
 - 두 후보 모두 국경 안보 강화를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같으나 트럼프 후보는 이민자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리스 후보는 이민자에게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국방비) 트럼프 후보는 향후 10년 동안 4,000억달러 규모의 국방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했으나, 해리스 후보의 국방 관련 정책 비용 집계는 불가(not available)한 것으로 나타남

- 트럼프 후보는 군사력 현대화를 중심으로 강한 국력을 강조하며 재임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국방정책에도 적용(동맹국들의 공정한 비용 배분 협력 등)
- 해리스 후보는 국방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특별히 언급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
- 트럼프(Trump) 후보의 공약과 공화당의 정강정책으로 제안된 정책을 종합한 결과, 정책 비용으로 인한 연방 채무는 향후 10년간 GDP 대비 최저 128%~최고 160%까지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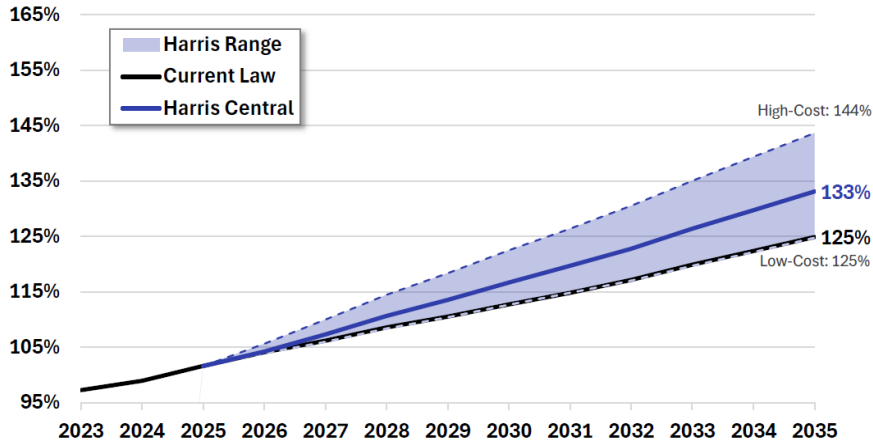
[그림 1] 트럼프(Trump) 공약에 따른 채무 추이



자료: CRFB, "The Fiscal Impact of the Harris and Trump Campaign Plans - US Budget Watch 2024," 2024.10.

- 해리스(Harris) 후보의 공약과 민주당의 정강정책으로 제안된 정책을 종합한 결과, 정책 비용으로 인한 연방 채무는 향후 10년간 GDP 대비 최저 125%~최고 144%까지 상승 전망

[그림 2] 해리스(Harris) 공약에 따른 채무 추이



자료: CRFB, “The Fiscal Impact of the Harris and Trump Campaign Plans – US Budget Watch 2024,” 2024.10.

CBO는 각 후보들의 정책에 관계없이, 현 법률이 유지/지속됨을 가정으로 분석(기준선 전망)한 결과, GDP 대비 채무는 2026년 102%에서 2035년 12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2. 사회보장·보건정책 공약의 재정·경제 영향

- 트럼프 후보의 경우 사회보장 기금의 고갈 가속화가 우려되는 정책을, 해리스 후보의 경우 부유층 과세를 통한 메디케어 관련 기금 자원 확보를 공약
- (기금 재정 전망) 미국 사회보장 체계의 주축인 공적연금과 공적건강보험의 경우, 노령·유족보험(OASI)은 2033년, 병원보험(HI)은 2036년에 기금 고갈 전망
- (트럼프 후보) 특정 소득 수준³⁷⁾ 초과 시 수혜자의 사회보장 수급 금액의 소득세 적용을 폐지하는 정책을 공약

37) 기타 수입 2만 5,000달러(부부합산 3만 2,000달러)

- (평가) 노동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사회보장 적격 대상인 노년층의 노동 활동 동기가 제고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인구 고령화(65세 이상 연령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한 기금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금 건전성 차원의 우려도 동시에 존재³⁸⁾
 - CBO의 『2024년 장기재정전망보고서』³⁹⁾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4년 14.2% → 2024년 17.8%로 증가하며, 2054년에는 22.3% 전망
- (해리스 후보) 메디케어를 강화하기 위해 연소득 40만달러 초과 소득자를 대상으로 순투자소득세(NIIT)를 3.8%에서 5%로 인상하여 메디케어 관련 기금⁴⁰⁾ 수입 확보 계획
- (평가)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통해 메디케어 관련 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한 수입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점은 있으나, 순투자소득세 등(메디케어 추가 세율 인상(0.9%* → 2.1%) 포함)의 정책은 17만 7천명의 일자리 감소 및 GDP를 0.5% 하락시키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⁴¹⁾⁴²⁾
 - 메디케어 기본 세율은 1.45%이며, 2013년부터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에 의해 소득 20만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 초과에 대해 0.9%의 추가세율⁴³⁾이 적용되었고, 해리스 후보는 이를 소득 40만달러 초과에 대해 2.1%로 재차 인상할 것을 제안⁴⁴⁾

38) CBO, "CBO's 2024 Long-term Projections for Social Security," 2024.8.28., <https://www.cbo.gov/system/files/2024-08/60392-Social-Security.pdf>, 검색일자: 2024.10.18.

39) 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to 2054*, 2024.3.20., Figure 3-1

40) 메디케어 병원보험 신탁 기금(Medicare Hospital Insurance Trust Fund)

41) Tax Foundation, "Kamala Harris Tax Plan Ideas: Details and Analysis," 2024.10.16.,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kamala-harris-tax-plan-2024/>, 검색일자: 2024.10.21.

42) New York Post, "Kamala Harris' tax plan would cost nearly 800k jobs: analysis," 2024.9.20., <https://nypost.com/2024/09/20/us-news/kamala-harris-tax-plan-would-cost-nearly-800k-jobs-analysis/>, 검색일자: 2024.10.21.

43) additional medicare tax(관련 링크: IRS, "Topic no. 560, Additional Medicare tax," <https://www.irs.gov/taxtopics/tc560>), 검색일자: 2024.10.21.

44) Tax Foundation, "Kamala Harris Tax Plan Ideas: Details and Analysis," 2024.10.16.,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kamala-harris-tax-plan-2024/>, 검색일자: 2024.10.21.

3. 트럼프 후보의 정책 공약: 4년 전과 비교

- ◇ 배타적인 국방정책과 감세를 통한 산업 지원 등 과거 트럼프 초선 당시의 대표 정책 기조를 이어가지만, 정책 수단으로서 가격통제나 자금지원보다 지출 효율화 등을 채택
- (유지) 자국 우선주의 중심의 배타적인 국방정책 기조와 세계개혁법(TCJA) 연장을 통한 감세 기조를 이어감
 - (국방) 국방력 강화 지속, 동맹국 간 공정한 비용 배분 추진, 국경 및 이민 정책 강경 유지 등
 - (제조업 지원) 2016 대선 당시 “made in America⁴⁵⁾” 슬로건 하에 국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계 혜택을 공약하였고, 2024 대선에서는 세계개혁법(TCJA) 연장으로 동일 기조가 이어짐
 - (개인 세금 감면) 2016 대선 당시 추진되었던 개인소득세 인하는 세계개혁법(TCJA) 연장으로 정책 재추진
- (변화) 교육 분야에서는 지출 효율화, 보건 분야에서는 특정 분야의 지원 집중으로 노선 변화
 - (교육) 2016 대선의 경우 교육기관 기부자 세액공제 및 보육 세액공제 등의 지원과 재원 확보 위주였다면, 2024 대선의 경우 교육부 폐지를 내세우며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 (보건) 가격통제 방법에서 세액공제 및 특정 서비스 제공으로 방법론 변화
 - (2016 대선) 메디케어 수가 조정, 약제비 상한가 도입, 보험료 인하 추진 등

45) 2020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추진한 “Made in America”는 중국으로부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계 혜택에 대한 정책

- (2024 대선) 출산 관련 보건 프로그램 정부 및 보험회사 부담 전환 및 소득 공제 등

■ (신규) 작은 정부 추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제공

- (작은 정부) 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낭비, 사기, 남용에 대한 단속 및 해결
- (에너지 및 환경) 그린 뉴딜 종료, 미국 내 에너지 생산 관련 규제 철폐
- (노동) 초과근무 및 팁 관련 세금 면세 추진

4. 해리스 후보의 정책 공약: 4년 전(민주당정책)과 비교

◇ '20 대선 당시 바이든 후보의 공약 및 행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되, 정책 구체화 단계에서 차이 존재

- ※ 해리스 후보의 경우, 선거 운동 과정에서 주요 공약에 대한 입장 변화가 생길 가능성 존재
 -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중도 사퇴하면서 러닝 메이트였던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를 승계한 것이기에, 민주당의 2024 정강정책 또한 기존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제안했던 공약들이 일정 부분 승계된 측면이 있음

■ (유지) 중산층 가계 지원, 부유층 과세, 사회보장 강화 등 주요 정책 방향은 2020 대선의 바이든 대통령과 2024의 해리스 후보의 입장이 일치

- (부유층 과세) 세제 혜택에 연소득 제한 설정(세제개혁법 연장), 고소득자 대상 증세(순투자소득세 증세), 고소득자 소득공제 제한(고소득 임원 급여 제한) 등 전반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부유층 과세 기조 유지
- (교육 및 보육) 고등교육 지원 확대 및 무상 보편 보육 제공 기조 유지

- (보건) 처방약 등 의약품 단가 협상 추진 및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연장
- (변화) 산업 지원, 사회보장 강화 등 정책 방향은 유지하나 정책 구체화 단계에서 타겟팅 여부, 지원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임
 - (제조 및 기반산업 지원) 세제혜택을 통해 산업을 지원하는 방법론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와 유사하나, 특정 산업에 집중하기보다 광범위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
 -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반도체, 에너지, 자동차 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해 직접적인 산업 지원
 - 해리스 후보는 미래산업 및 미국 자국 산업의 타국 대비 전략적 우위 확보를 강조하나, 공약 단계에서 구체적인 특정 산업 집중 정책은 부재함
 - (보편적 복지) 소득 보장형 제도 강화에서 기존 세액공제 확대 시행으로 전환
 - 2016 대선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사회보장 및 보충적 소득제도 수급액의 최저 한도를 연방 빈곤선에 비례하여 조정하는 형식으로 소득 보장형 제도를 강화
 - 해리스 후보는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세액공제(CTC) 등 기존 제도의 확대 시행을 추진
 - (인프라) 2016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 하에 환경 친화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해리스 후보는 관련 정책 부재

5. 과거 공약 비용 분석에 대한 평가

- (CRFB 추정에 대한 하원 예산위원회의 비판)⁴⁶⁾ CRFB의 과거 대선공약 비용 분석 중 바이든 및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영향 평가 보고서⁴⁷⁾의 경우 각 행정부가 유발한 국가채무의 규모에 대해 바이든 후보의 비용에 대해서는 과소추계, 트럼프 후보의 비용은 과다추계되었다는 입장문을 발표
- (CRFB 보고서의 분석) CRFB의 주요 정책 발생 비용(net deficit)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임기부터 10년 동안 8.4조달러, 바이든 행정부는 10년간 4.3조달러의 국가채무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집계

 - (트럼프) 임기 내 정책에 의해 유발된 총 신규 차입 8.8조달러 대비 재정적자 감축에 기여한 정책의 규모는 4,430억달러 → 따라서, 순 국가채무 유발분은 8.4조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코로나19 관련 지출은 3.6조달러가 해당
 - (바이든) 임기 내 정책에 의해 유발된 총 신규 차입 6.2조달러 대비 재정적자 감축에 기여한 정책의 규모는 1.9조달러 → 따라서, 순 국가채무 유발분은 4.3조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2.1조달러가 코로나19 관련한 미국 구조계획법(ARP)에 기인
- (하원 예산위원회의 분석)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임기(3년 6개월) 동안 4.3조달러가 아닌 11.6조달러*의 재정적자 증가를 유발하였음을 지적

 - * 신규 재정 수반 입법으로 인한 4.8조달러, 이자 상승으로 인한 4.8조달러,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으로 인한 2조달러 비용 등을 근거 항목으로 제시
 - (바이든 정부 비용 과소추계 원인) ①의회예산처(CBO)의 입법 조치에 따른 비용 추계 일부 생략 ②물가 상승 유발분으로 인한 순이자 비용의 증가 미반영

46) 하원 예산위원회, "Fact Check Alert: Debunking CRFB's Analysis of Trump and Biden Impacts on the National Debt," 2024.6.27., <https://budget.house.gov/press-release/fact-check-alert-debunking-crfbs-analysis-of-trump-and-biden-impacts-on-the-national-debt>, 검색일자: 2024.10.16.

47) CRFB, "Trump and Biden: The National Debt," 24.6.24. <https://www.crfb.org/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s/Trump-and-Biden-The-National-Debt.pdf>, 검색일자: 2024.10.16.

- (트럼프 정부 비용 과다추계 원인) 세계개혁법(TCJA)의 간접적 효과로 창출된 기업 매출 증가로 인한 세입 증대분 미반영
- (CBO 분석) 한편, CBO 및 OMB를 통해 각 행정부의 재임기간 4년을 기준으로 신규 발생 재정적자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바이든 정부의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규모 대비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4 참고〉)
- 각 정부에서 재정적자 수치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트럼프 정부의 경우 임기 마지막 해인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회계연도, 바이든 정부는 임기 첫 해이자 코로나19 발발 두 번째 연도인 2021회계연도로 집계

〈표 4〉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중 재정 실적 비교

(단위: 십억달러, %)

정부	구분					합계
	회계연도	2017	2018	2019	2020	2017~2020
트럼프	회계연도					
	재정적자	665 (3.4%)	779 (3.8%)	984 (4.6%)	3,132 (14.7%)	5,560
바이든	회계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1~2024
	재정적자	2,776 (12.1%)	1,375 (5.4%)	1,695 (6.3%)	1,834 (6.6%)	7,680

주: 1. 2024 회계연도의 경우 확정치가 아닌 추정치임

2. 괄호 안은 GDP 대비 비중임

자료: 1. 의회예산처(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7 to 2027*, 2017.1.

2. 의회예산처(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1 to 2031*, 2021.2.

3. 관리예산처(OMB),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 각 년도

- 결론적으로, 각 후보의 실제 공약 비용은 기술적인 오차 외에도, 향후 예측하지 못한 경제, 보건 및 자연재해 위기 등으로 인해 각 후보 공약의 실제 비용은 추정치 대비 큰 차이(과소·과다 추정)를 보일 수 있음
 - 향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상(1/3)·하원(전체) 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다수당 여부에 따라 공약 비용의 큰 변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정부 여당이 양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당 후보의 공약 집행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최근 중도층(swing voters)의 표심 확보를 위해 각 후보가 공약에 대한 입장(stance)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상황도 발생하기에 향후 진행되는 선거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양당 후보 모두 지출 확대 중심의 채무 증가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나, 대선 이후 재정건전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현 재정상황을 반영한 유의미한 재정 대응 조치가 취해질지 귀추가 주목됨

참고문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법연구센터), 「2017년 11월 조세동향」, 2017.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4년 8월호 재정동향」, 2024.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24년 9월호 재정동향」, 2024.

- Agenda 47, <https://www.donaldjtrump.com/agenda47> (accessed October 31, 2024).
- A new way forward for the middle class, https://kamalaharris.com/wp-content/uploads/2024/09/Policy_Book_Economic-Opportunity.pdf (accessed October 31, 2024).
- CBO, “CBO’s 2024 Long-term Projections for Social Security,” <https://www.cbo.gov/system/files/2024-08/60392-Social-Security.pdf> (accessed October 18, 2024).
- 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to 2054,” <https://www.cbo.gov/publication/59711> (accessed October 31, 2024).
- CMS, “Medicare Drug Price Negotiation,” <https://www.cms.gov/inflation-reduction-act-and-medicare/medicare-drug-price-negotiation> (accessed October 14, 2024).
- CRFB, “Donald Trump’s Proposal to End Taxes on Overtime,” <https://www.crfb.org/blogs/donald-trumps-proposal-end-taxes-overtime> (accessed October 31, 2024).
- CRFB, “Trump and Biden: The National Debt,” <https://www.crfb.org/sites/default/files/media/documents/Trump-and-Biden-The-National-Debt.pdf> (accessed October 16, 2024).
- Heritage, “Correcting Carter’s Mistake: Removing Cabinet Status from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https://www.heritage.org/education/report/correcting-carters-mistake-removing-cabinet-status-the-us-department-education> (accessed October 21, 2024).

- IRS, “Changes to Publication 583, (Rev. January 2021),” <https://www.irs.gov/forms-pubs/changes-to-publication-583-rev-january-2021> (accessed October 31, 2024).
- IRS, “Topic no. 560, Additional Medicare tax,” <https://www.irs.gov/taxtopics/tc560> (accessed October 21, 2024).
- OMB,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25,”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4/03/budget_fy2025.pdf (accessed October 31, 2024).
- Tax Foundation, “Kamala Harris Tax Plan Ideas: Details and Analysis,”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kamala-harris-tax-plan-2024/> (accessed October 21, 2024).
- Tax Foundation, “Donald Trump Tax Plan Ideas: Details and Analysis,”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donald-trump-tax-plan-2024/> (accessed October 21, 2024).
- 20-point platform, <https://www.donaldjtrump.com/platform> (accessed October 31, 2024).
- *Forbes*, “No Tax On Tips Act—Implications And Reservations,” June 26, 2024, <https://www.forbes.com/sites/andrewleahey/2024/06/26/no-tax-on-tips-act-implications-and-reservations/> (accessed October 28, 2024).
- *New York Post*, “Kamala Harris’ tax plan would cost nearly 800k jobs: analysis,” September 24, 2024, <https://nypost.com/2024/09/20/us-news/kamala-harris-tax-plan-would-cost-nearly-800k-jobs-analysis/> (accessed October 21, 2024).

- *The Washington Post*, “Why Trump’s and Harris’s ‘no tax on tips’ plans may not help tipped workers,” August 13, 2024,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4/08/13/trump-harris-tax-free-tips/> (accessed October 28, 2024).
- 미국 공화당, “2024 GOP Platform: Make America Great Again!,” https://rncplatform.donaldjtrump.com/?_gl=1*4ikg0p*_gcl_au*MTYwNzc0MTMyOS4xNzMwMzQwNTEy&_ga=2.123143560.228803291.1730340512-1344130662.1730340512 (accessed October 31, 2024).
- 미국 민주당, “‘24 Democratic Party Platform,” https://democrats.org/wp-content/uploads/2024/09/2024_Democratic_Party_Platform_8a2cf8.pdf (accessed October 31, 2024).
- 미국 의회 하원 예산 위원회, “Fact Check Alert: Debunking CRFB’s Analysis of Trump and Biden Impacts on the National Debt,” <https://budget.house.gov/press-release/fact-check-alert-debunking-crfbs-analysis-of-trump-and-biden-impacts-on-the-national-debt> (accessed October 16, 2024).



2024 미국 대통령 후보
재정/조세 선거공약 비용 비교

트럼프(공화당) VS 해리스(민주당)

kipf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代) www.kipf.re.kr